

한·미 FTA 반대, 농지법 개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 촉구

- 2006년 축산인 결의대회, 전국 4개 권역서 개최 -

축산인들이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결연한 의지로 일어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24일 경기·강원권(이천 설봉호텔)을 시작으로 25일 충청권(천안 상록리조트), 29일 전라권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9월 1일 경상권(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축산 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에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축단협부회장)은 공동주최단체장 인사를 통해 "전 축종 농가들이 모여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각 권역별 축산 농가들에게 축산현안인 한·미 FTA, 식품안전처 신설, 도축세 폐지, 농지법 개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경마세율인하·축발기금 확충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축산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축산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축산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축단협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축산과 농업을 궤멸시키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농지 내 축사 규제를 즉각 완화하고 식품안전처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축세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철폐하며 경마세율을 개선, 축발기금 재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1. 지재학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최영렬 양돈협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규택 의원, 정영채 수의사협회장 (왼쪽부터)
2. 경기강원 축산인결의대회 전경

결의문 낭독 후, 장대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조직투쟁팀장과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

맹 정책위원장이 '한·미FTA 특강'을 하였고 이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등이 부문별 축산현안에 대한 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농지내 축사규제 완화에 대해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고 유희경작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지내 축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나, 아직 공감대 형성이 미비한 상황이다"며 "현재 농림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농지를 보전하면서 축사설치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와 농지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축단협을 중심으로 농림부, 경종농업단체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이회장은 설명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역시 축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제도에 따르면 축사 신축시 평당 최대 58,000원까지 부과되는데 이는 친환경축산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건교부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에도 제도 재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발전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경마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경마세제는 마사회법에 명시된 마사회 설립 목적대로 지방재정 기여보다 축산업 발전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미국과 FTA가 체결될 경우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한미FTA 농대위와 연대하여 오는 9월 5일 3차 협상저지 투쟁원정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지역별로 총 쫓기대회를 추진키하며 '12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 'FTA 저지 100만인 대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이승호 회장이 농지내 축사규제, 세계개선(기반시설부담금, 경마세제)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4. 축종별 지역지도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5. 강기갑의원(민주노동당)이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도축세는 축산농가가 납부함에도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지자체 사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와 돼지만 도축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축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식품안전처와 관련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괄 관리토록 하는 것은 생산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럽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생산부처인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규택 국회의원(한나라당, 여주·이천), 홍문표 국회의원(한나라당, 홍성·예

산), 강기갑 국회의원(민노당, 비례대표), 이인기 국회의원(한나라당, 고령·성주·칠곡) 등이 참석해 축산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

앙연합회 서정의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등 농민단체장이 참석하여 농축산업 문제에 대해 축산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해나갈 것을 밝혔다. ㉞

축산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축산인들에게 축산업은 생존산업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축산업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병들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농업농촌 구조를 파괴하고 고사(枯死)시키려는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축산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축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인 채 새로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로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축발기금 확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책도 재원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119조원이라고 하는 허울로 기만해서는 결코 안된다.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의 기반자체를 붕괴시키고 우리가 연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단순 시장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농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우리 축산인은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 우리 축산과 농업을 궤멸시키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지내 축사규제를 즉각 완화하라!
- 축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처 신설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예산을 확대하라!
-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축세를 조속히 폐지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당장 철폐하라!
- 경마세율 인하하여 축발기금 재원을 확충하라!

2006년 9월 1일

2006년 축산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경북,경남) 참가자 일동